

군무원 전문 대장부 학원
강사 한세훈 해설

1	②	2	③	3	③	4	②
5	④	6	③	7	②	8	②
9	③	10	④	11	③	12	②
13	①	14	④	15	②	16	④
17	②	18	③	19	②	20	④
21	④	22	③	23	②	24	②
25	②						

1. 정답 ②

【해설】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중 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 소원심 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2.3.29. 2010헌마599).

2. 정답 ③

【해설】

③ 지하철공사의 근로자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공사와 노조가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되므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로 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대판 2007.10.25. 2007두2067).

3. 정답 ③

【해설】

① (o)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부담은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정의한다.

② (o) 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③ (x) 운행시간과 구역을 제한한 것은 부담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부관으로 볼 수 있다.

④ (o) 부담은 실무상 제한, 조건, 기한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4. 정답 ②

【해설】

①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② (x) 대법원의 명령·규칙의 위헌성 심사를 통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된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그 명령·규칙은 당해 사건에 한정되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상 법률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효력이 부인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o) 행정소송법 제6조

④ (o)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 49)

5. 정답 ④

【해설】

④ (x)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권리이므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4.9.23. 2003두1370).

6. 정답 ③

【해설】

① (o) 공무원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이는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헌재 2013.9.26. 2011헌바272).

② (o) 판례에 따르면,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본다. 반면,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도 본다.

③ (x).건축법 제79조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서도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시정명령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고,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재량권이 인정되고, 시정명령을 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판례의 취지이다.

④ (o)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판 1998.8.25. 98다16890).

7. 정답 ②

【해설】

① (o)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자연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② (x)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외에 민간이 그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③ (o) 청문에 관하여,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37조 제6항)

④ (o) 개인정보보호법은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

8. 정답 ②

【해설】

② (x)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 11. 26. 2002두5948).

9. 정답 ③

【해설】

③ (x)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소송요건은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0. 정답 ④

【해설】

④ (x) 판례도 행정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 내린 바 있다. 즉 행정계획을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형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활동기으로 정의 한다. (대판 2007.4.12. 2005두1893).

11. 정답 ③

【해설】

① (o) 토지거래허가는 사인과 사인의 사법상 법률행위(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이전)를 대상으로 한다.

② (o) 사인과 사인 사이의 사법상 법률행위가 바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행정청의 인가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 (x) 무효의 원인에는 위법 사유 중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 외에도 선행처분이 무효인 그에 관련된 후행 처분이 무효라는 법리도 있다. 즉 무효라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이 아니다. 무효와 유효는 효력의 문제이고 위법과 적법의 문제와 다르다.

④ (o) 토지거래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반면,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12. 정답 ②

【해설】

② (o) 행정입법을 제정·개정·폐지 하려고 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중에서 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 절차는 대통령령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행정절차법 제42조 제2항)

13. 정답 ①

【해설】

① (x)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즉 전반부의 설명은 옳은 설명이나 후반부의 설명이 틀린 설명이다. 항고소송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다룰 문제이다.

14. 정답 ④

【해설】

① (o) 객관식 오엠알 프로그램을 사람이 만든 후에 그 연산에 따른 결과로 순위가 정해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의 자동결정의 예에 속한다.

② (o) 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작용 중 하나이므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③ (o) 행정의 자동결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의 자동결정은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x) 일반적인 견해는 행정의 자동결정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성을 인정한다.

15. 정답 ②

【해설】

② (x) 영조물 책임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의 개념과 일치한다. 따라서 공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영조물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다. 도로라는 인공공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형태적 요건 외에도 공용개시행위와 공용지정행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문과 같이 공용개시와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영조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16. 정답 ④

【해설】

① (o) 국가배상책임은 근대국가 초기의 국가무책임 사상으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공무원 개인의 민사상 책임으로 이해되었다.

② (o)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법의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부당의 정도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o)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국가배상법은 추가적으로 영조물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x)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하나인 직무집행은 외형이론에 따라서 판단하므로 공무원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17. 정답 ②

【해설】

② (x) 신청의 내용이 되는 처분은 공권력 행사의 요구이어야 하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요구 또는 사법상 계약의 체결 요구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1991. 11. 8. 90누9391).

18. 정답 ③

【해설】

③ (x)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의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2009. 6. 25. 2008두13132)

19. 정답 ②

【해설】

② (x) 지문은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④ (o) 대집행의 계고와 강제징수의 독촉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통지에 해당한다.

20. 정답 ④

【해설】

① (x)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가 옳은 표현이다.

② (x) 선정당사자는 5인 5명 이하가 아니라 3명 이하이다.

③ (x) 90일이 아니라 60일이 옳은 표현이다. 다만,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o) 행정심판에서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9조 제3항)

21. 정답 ④

【해설】

① (o)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한 선행처분의 위법사유를 후행처분을 다투는 소에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국민에게 권리구제의 폭이 넓어진다.

② (o)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때에는 이를 전제로 행해지는 후행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③ (o)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법적효과를 의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x) 선행행위의 하자에 대해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 하였다 라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2. 정답 ③

【해설】

③ (x)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판1994.10.28, 94누5144)

23. 정답 ②

【해설】

(가)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료의 납입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사법관계]

(나)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사법관계에 해당한다.[사법관계]

(다) 사법상 고용계약으로 본다.[사법관계]

(라) 변상금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공법관계]

(마) 공무원복무규율 등의 적용을 받는 공법관계로 본다.[공법관계]

24. 정답 ②

【해설】

②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 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25. 정답 ②

【해설】

② (x)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대판 1995.12.22. 94다51253).

③ (o)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대판 2002.11.8. 2001두8780)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2019년 7월 26일 오후 2시, 2020 대비 군무원 개강!

국내 유일 군무원 면접관 출신 교수님이 가르치는
 군무원 면접 1차 전화 접수: 2019년 6월 26일 오후 2시부터
 2차 전화 접수: 2019년 7월 12일 오후 2시부터
 3차 전화 접수: 2019년 7월 19일 오후 2시부터
<http://g.daejangbu.com/> 02-849-7746